



박정희 시대 신문 독자의 사회문화사

A Sociocultural History of Newspaper Audience in the Era of Park Chung-Hee Regime

저자
(Authors) 채백
Baek Chae

출처
(Source) [언론정보연구 51\(2\)](#), 2014.8, 5-33 (30 pages)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51\(2\)](#), 2014.8, 5-33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468124>

APA Style 채백 (2014). 박정희 시대 신문 독자의 사회문화사. [언론정보연구](#), 51(2), 5-33.

이용정보
(Accessed) 서울대학교
147.46.182.23
2015/12/30 15:0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박정희 시대 신문 독자의 사회문화사*

채 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bchae@pusan.ac.kr

이 논문은 박정희 정권을 대상으로 신문 독자집단의 신문에 대한 인식과 행동, 그리고 당시의 언론 상황으로 인한 문화적 산물을 살펴보았다. 정치 권력에 의해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언론은 이에 협조하면서 기업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독자들의 불만과 비판은 매우 높았다. 독자들의 주된 불만은 첫째는 정치적 정보의 부족과 비판의 실종에 대한 것이었고 둘째는 신문의 획일화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독자들은 구독 거부라는 소극적 대응을 비롯하여 각종 시위에서 언론을 규탄하고 급기야는 화형식까지 벌였다. 하지만 독자들은 언론인들에 대해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행간 읽기'라는 독특한 패턴을 낳게 되었다. 또한 독자들의 기대는 『동아일보』의 광고 탄압 사태에서 의견 광고라는 형태의 적극적인 연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극심한 언론 탄압과 대국민 선전은 유언비어의 횡행을 낳고 레드 콤플렉스를 심화시켰으며 간막이 문화라는 독특한 양상을 낳았다. 권력의 탄압과 회유 속에 형성된 언론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민주화 국면의 경쟁 체제 속에서도 쉽게 극복되지 못하고 오늘날 신문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KEYWORDS 언론사 • 제3공화국 • 제4공화국 • 박정희정권 • 신문 • 독자 • 사회문화사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머리말

최근 박정희 정권기가 다시금 주목되고 있다. 권보드래와 천정환(2012, 553쪽)은 1960년대를 일컬어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의 직접적 기원”이라고 규정하면서 “멀리 19세기 말~20세기 초나 1920~1930년대를 참조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는 1960년대를 통한 재구조화의 결과이거나 그 잔여물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더구나 2012년의 대선 결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새로운 유신으로 규정하는 논의(한홍구, 2014)까지 생겨나면서 박정희 정권기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이는 언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19세기 말 제국주의의 틈새에서 시작된 한국 언론의 역사는 식민지와 미군정, 1950년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정치적 경험 속에서 외부적 힘의 강력한 작용에 의해 구조를 만들어 왔다. 그러한 구조가 박정희 정권기의 산업화와 언론 정책에 의해 더욱 왜곡된 형태로 고착화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채백, 2000).

‘장미와 밥’, 즉 생존과 인간적 존엄을, 다시 말해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원했던 당시의 시대적 요구(권보드래·천정환, 2012)는 결국 한 그릇 밥으로만 귀결되었고 장미는 그 이후 역사의 짐이 되고 말았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기업화와 함께 과거의 만성적인 경영난은 넘어서게 되었지만 언론 자유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왜곡된 언론 구조는 그 이후의 달라진 환경에서도 극복되지 못하고 오늘날 신문 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 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박정희 정권기의 신문을 논하려고 한다. 그동안 박정희 정권기의 언론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해방 이후를 다룬 통사적 연구에서 박정희 정권기의 언론 정책이나 통제, 산업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주동황(1993), 김남석(1994), 김해식(1994), 채백(2000)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박정희 정권기의 중요성에 새롭게 주목하면서 이

시기 언론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학술적 규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과 역사 분과(2012, 2013)의 연구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 글도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정권기의 언론 현상 중 그동안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던 독자의 측면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신문의 독자는 신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매체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박정희 정권기 신문의 독자들이 신문을 어떻게 인식, 평가하였으며, 나아가서 신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또한 이 시대의 언론 상황이 만들어낸 문화적 양상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다시 말해 독재 권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통제되던 언론에 대해 수용자인 독자로서 소극적 및 적극적 대응을 보였던 양상과 함께, 이러한 언론 상황으로 말미암아 출현하였던 문화적 산물에 대해서도 논하려고 한다.

2. 박정희 정권의 언론 통제에 따른 신문의 변화

1) 신문의 기업화와 카르텔

1961년 5월 16일의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주역들은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언론 검열에 들어가면서 뒤이어 언론 통폐합을 실시하였다. 1962년 6월 군사정부는 ‘언론을 기업으로 육성하고 그 내용을 향상’시킨다는 요지의 새로운 언론정책을 공포하였다. 이는 이후에도 박정희 정권 언론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언론을 통제하는 한편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통제와 회유의 양면적 정책을 펼쳐 나갔던 것이다.

채찍과 당근을 앞세운 박정희 정권의 언론 정책에 언론사들은 굴복하고 순응하면서 그 당근을 바탕으로 기업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박정

권은 먼저 세 개의 대표적 야당지를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굴복시켰다. 『경향신문』은 1966년 강제 경매 처분의 형식으로, 『조선일보』는 1967년 호텔 건설을 위한 현금 차관이라는 특혜로 포섭하였으며 『동아일보』는 1968년 월간지 『신동아』의 기사를 반공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아 굴복시키고 말았다.

경제적 특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금 차관의 제공이었다. 차관을 저리로 제공받은 각 신문사들은 고속운전기를 도입하고 사육을 신축하는 등 자본 축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1960년대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8~10% 정도였던 반면 언론 기업들의 성장률은 평균 20% 정도로 나타났다(한국 사회언론연구회, 1996, 72~73쪽).

이처럼 신문사들의 기업적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상업주의적 경향은 심화되어 갔다. 특히 1965년에 창간된 『신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처음부터 상업주의를 표방하고 나서면서 신문 판매와 광고 유치를 위한 신문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윤상길, 2013).

그러나 그 경쟁은 부수 확대를 위한 경쟁일 뿐 내용면에서의 차별화를 위한 경쟁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결과를 빚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요 일간지들의 카르텔 체제가 지목된다. 1961년에 신문발행인협회로 출범하였다가 1967년 명칭을 바꾼 신문협회가 이 카르텔의 주체였다. 이 단체는 산하에 총무협의회와 광고협의회, 판매협의회를 두고 업무와 광고, 판매 등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증면과 가격 면에서 강력한 카르텔을 형성하였다(정진석, 2012, 9쪽). 이 카르텔로 신문사들은 지면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상호 공생을 모색하면서 상업적인 면에서만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게 되었다.

당시 카르텔은 신문사들의 자발적 결정보다는 정부의 묵인과 방조 속에 이루어졌다(서정우, 1988). 1965년 창간되어 신문 시장에 후발 주자로 참여한 『중앙일보』가 발행면수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나섰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였다(김해식, 1994, 131쪽). 정부는 신문사들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까지도 한 것이다.

2) 신문의 탈정치화와 획일화

전술한 대로 5·16 쿠데타 직후 언론통폐합으로 수많은 언론사들을 문닫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석간제로 운영되던 신문계에 단간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신문의 정치적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이 제도는 군사정부가 의도한 대로 지면의 축소와 함께 비판적 정론성의 축소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내용도 급격히 연예, 오락에 치중하는 상업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으며 반면 비판적 논조의 약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정부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보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김해식, 1994, 103쪽). 더구나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언론사에 기관원을 상주시켜(강준만, 2000, 428쪽) 지면에 개입함으로써 사실상의 사전 검열을 실시하였다.

탈정치화된 신문에서 개성이 드러나기는 어렵다. 전술한 카르텔 체제 속에서 안정된 경영을 모색하다보니 각 신문의 지면은 획일화되고 말았다. 각 신문이 거의 대동소이한 지면으로 규격화되며 개성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정진석, 2012, 9쪽). 이러한 평가는 이미 1967년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해 신문의 날을 맞아 소설가 이병주는 『경향신문』에 게재된 ‘신문의 위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대등한 규범과 뉴스 가치를 가지고 운영되는 신문들이 비슷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의 한국 신문들이 “개성을 상실하고 획일화 되어 가는 현상에 우리는 신문의 위기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획일화된 신문을 긍정하려면 사회생활을 위해서 여러 개의 신문사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병주는 “사람이 신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운전기가 신문을 제작하는 것 같다”고 뼈아픈 지적을 하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신문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명분 면에서는 ‘빈사상태에 있다’고 맺고 있다. 소설가 이병주도 부산의 『국제신보』에서 편집국장과 주필을 역임하는 등의 경력을 지녔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신문 지면의 획일화를 평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점차 확대되어 언론계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1972년 5월 아시아신문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신문들은 엘리트지와 대중지의 차별화도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무특수성, 획일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조선일보』 1972. 5. 17. 5면). 신문의 획일화가 고착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간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언론의 탈정치화는 급기야 ‘연탄가스 중독’에 걸렸다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 당시의 대표적 논객이며 『동아일보』 주필로 있다 1968년 『신동아』 필화 사건으로 그만 둔 천관우의 평론집 『언관 사관』에서 당시의 언론을 ‘연탄가스에 중독’되었다고 평가한 것이다(『동아일보』 1969. 9. 23. 5면). 당시 언론의 상황과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평가라고 하겠다. 급격한 산업화가 추진되며 자유와 인권이 억압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러 부문에서 모순된 현실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 일어났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도 못하였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인 성유보의 회고에 의하면 1975년 봄만 보더라도 3월 말 고려대생들의 시위나 4월 3일의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시위, 서울 농대생 김상진의 자결, 5월 22일이 서울대 시위 사건’ 등이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고 한다(『한겨레』 2014. 3. 24.).

3.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소극적 대응

1) 독자들의 신문 비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정권기는 산업화와 경제 성장으로 소득 수준도 성장하면서 신문의 독자층도 급속히 확대되어 갔다. 1969년 말 문공부가 시행한 전국신문구독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1967년에 비해 52만부가 늘어 33.8%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국 가구의 50%가 신문을 정기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은 0.9가구당 1부 즉

상당수의 가구가 2종 이상을 정기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1970. 4. 21. 7면). 이처럼 국민 대부분이 신문을 구독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신문 보급이 엘리트 중심의 단계를 넘어 대중화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는 전술한 생활 수준의 향상 외에도 교육 기회의 확대와 이에 따른 문맹률 감소도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채백, 2013, 49쪽). 이러한 사실들은 독자층의 규모도 늘었지만 그 교육 수준도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권력의 통제에 굴복하여 협조하면서 반대급부로 제공된 경제적 혜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상업화의 단물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는 언론에 대해 독자들의 비판 의식은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다. 신문은 정치적 기능을 상실하였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1971년 『경향신문』이 실시한 독자 조사 결과를 보면 기사 코너별 열독률에서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상위를 차지하였다(『경향신문』 1971. 10. 6. 15면). 같은 신문사가 1972년에 행한 조사에서는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읽느냐를 조사한 결과 정치 기사가 12.7%로 1위를 차지하였다(『경향신문』 1972. 4. 6. 5면).

독자들의 욕구를 신문이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독자들의 불만과 비판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경향신문』 1965년 4월 6일자 5면을 보면 ‘신문의 날’ 특집으로 다양한 계층 독자들의 신문 지면에 대한 평가를 게재하였다. 한 복덕방 주인은 “관권과 대결해서 민권을 옹호해 온 것이 한국의 신문인데 요즘은 형편없이 무기력해진 것 같다”며 그 래도 매일 보기는 하지만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비판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 통제가 심화되어 가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어 갔다. 독자들의 신문 비판 중 당시 지면에 반영된 것은 주로 신문이 획일화되어 간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지적한 신문의 차별성 실종에 대해 독자들도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1971년 경향신문사가 신문의 날을 맞아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신문의 현실과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한국 신문이 독자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있다면 그 주요 이유는 무엇

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2개 응답)한 결과 ‘각 신문이 특징이 없고 규격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으며, ‘사실보도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0.6%로 2위, ‘정치권력에 아부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5.9%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이 결과는 당시 신문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전문가들과 지식인 집단에 의해 시작된 신문의 획일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점차 일반 독자들에게도 확산되어 갔다. 더욱이 1972년의 10월 유신 이후 언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권력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그에 맞추기며 혜택에 취해 있던 유신기 언론에 대해 독자들의 비판은 높아만 갔다. 1973년 한국신문연구소가 시행한 독자 여론조사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지적되었다. 서울 시내 독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자성향 조사에서 독자들은 신문들이 획일화되어가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63.9%로 가장 많았다(『동아일보』 1973. 5. 2. 5면). 이는 앞서 지적한 신문의 탈정치화와 획일화에 대한 비판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당시의 언론 상황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을 의미할 것이다.

『경향신문』이 1979년 4월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기획한 3면의 기사에서도 이와 같은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난다. ‘독자가 참여하는 오늘의 신문’이라는 제목의 이 기획은 당시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과 바람직한 참여 방안을 묻는 앙케이트 형식의 기사였다. 언론학 교수부터 주부와 농민, 학생에 이르기까지 각 직종별로 8명이 참여한 이 기사에서 가장 지배적이었던 의견은 신문의 특성과 개성이 없이 천편일률적, 획일적이라는 것이다. 8명 중 6명의 응답자가 표현을 달리하였지만 같은 의견이었다. 서강대 신방과의 최창섭 교수는 “여건이 그렇겠지만 신문간에 개성이 없다. 중앙지끼리는 물론 중앙지와 지방지 사이에도 개성이 없다”고 신문의 획일화 현상을 비판하였으며 특히 주부 조재현은 “조건에서 본 기사를 그대로 다시 석간에서 보는 것은 여간 짜증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마다 지면의 내용이 차별성이 없어져 제호와 연재 만화, 연재 소설만 제외하고는 다들 게 없다는 평가까지 받게 되었다. 한 독자는 『동아일보』 지면에 실린 신문평(『동아일보』 1979. 1. 12. 5면)을 통해 ‘일간지 체제의 평준화’를 지적하였다. 신문마다 면수뿐만 아니라 면 배치도 똑같으며 외신 같은 경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경우도 있음을 비판하였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권력의 통제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당시 신문사들이 카르텔 체제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고 공생을 모색하던 결과였다.

독자들의 비판 의식은 신문 구독을 거부하는 행동으로도 나타났다. 신문 논조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구독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는 말이다. 『동아일보』 1979년 5월 18일자 5면에 실린 ‘흐름’란의 독자 투고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광주에 사는 정관진이라는 독자는 투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집에서는 오래 전부터 중앙지 둘, 지방지 하나를 구독해 오다가 얼마 전부터인가 획일적인 편집과 뉴스 보도에 환멸을 느껴 모 중앙지 하나만을 선택, 구독하고 나머지는 모두 끊어버렸다. ...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로 생각되지만 이곳 광주 시내 주택가 골목엔 집집마다 ‘신문 사절’이란 쪽지 투성이다. ...

신문 지면의 획일적인 보도와 편집에 환멸을 느껴 구독하던 세 종류의 신문 중 하나만 제외하고 끊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독자는 “각 신문사는 알찬 내용에 적당한 구독료로 판매를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신문의 천편일률적인 내용과 편집에 불만을 느껴 구독을 중단한 사례들까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독자들의 구독 패턴, 행간 읽기

당시의 사회 현실을 다루는 중요한 내용들이 신문 지면에서 사라지자 독자들은 신문을 읽어도 정보에 대한 욕구는 충족되기 어려웠다. 그래도

신문을 계속 구독하는 독자들은 지면을 탐색하며 당시 사회의 주요 변화를 ‘탐지’하려는 안타까운 몸짓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앞에서도 인용한 『경향신문』 1979년 4월 7일자(3면)의 신문의 날 기획기사에서 서강대 교수이던 최창섭은 “신문을 읽기는 하되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졌다. 기사의 겉 내용보다 행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풍조가 강해진 것은 그만큼 신문이 신뢰도를 잃은 까닭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소설가 박완서도 『동아일보』 1979년 4월 6일자 5면에 게재된 ‘나의 신문평’에서 지면에 가득한 활자를 읽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끼게 되며 이 때문에 ‘행간을 더듬게 된다’고 술회하였다. 이 말들은 당시 신문이 처한 현실과 이에 대한 독자들의 대응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독자들이 행간을 읽는다는 것은 당시의 언론이 권력의 통제에 순응하여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자들은 그래도 기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전연 도외시하지는 않고 무언가 암시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기대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 무언가를 찾으려는 노력이 바로 이 ‘행간을 읽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치 권력의 탄압이 무서워서, 그에 굴복한 사주가 가하는 유형, 무형의 압력을 뿌리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양심이 살아 있는 존재들이기에 무언가 감추어진 단초를 남겨 놓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면에 나타난 활자 외에도 행간에 감추어진 진실을 뒤져가며 읽으려는 독자들의 눈물겨운 노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채백, 2013, 50쪽).

행간읽기의 예를 들어보자. 유신 시절 대학가에서는 유신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이에 관한 뉴스는 전혀 지면에 반영되지 않았다. 1975년 5월 22일의 서울대 시위는 당시의 철저한 억압 분위기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다.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으로 관련자들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였으며 베트남 사태 이후의 안보 광풍, 거기에 직전인 5월 13일에는 긴급조치 9호까지 공포한 상황에서 터진 것이었다(신동호, 2007, 122쪽). 이 사건도 전혀 보도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그 전해 11월에 임기를 마치고 연임한 서울대 한심석 총장이 사표를 내야 했다. 당시 언론들은 5월 26일자

에 이를 보도하면서 『동아일보』는 이례적으로 1면 하단에 3단 기사 크기로, 『경향신문』은 사회면의 좌측 상단에 역시 3단으로 보도하였다. 이와 함께 치안본부장과 서울시경국장도 경질되었는데, 이 사실도 두 신문은 그해 5월 27일자 1면에 3단 크기로 보도하였다. 서울대생들이 벌인 반유신 시위에 관한 기사도 보도하지 않았지만 서울대 총장과 시경국장, 치안본부장이 그만 두는 것을 보고 독자들은 서울대에서 무언가 시국 관련 사건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간을 찾아서 읽는 독자들의 이 노력은 독자들도 언론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 기초한 것이었다. 언론인들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그들이 왜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를 대부분의 독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또한 이 현실이 좀처럼 넘어서기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도 있었기에, 독자들은 언론을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973년 신문의 날을 맞아 『동아일보』 4월 6일자 지면에 게재한 소설가 손장순의 글에서도 드러난다. 신문이 읽을거리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시작한 손장순은 언론의 어려움과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가능한 출구가 어딘가에는 존재할 거라며 언론은 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손장순은 “그렇다고 우리가 신문에 무모한 모험이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은 안전한 위치에 피신을 하고 안일과 속된 번영을 다 꾀하면서 남에게 저항의 전초를 서지 않는다고 공박한다거나 … 혼자서 십자가를 메라고 짐을 떠맡기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인들의 책무를 강조하면서도 여기에 독자들도 함께 하리라는 연대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박정희 정권기의 이러한 ‘행간읽기’는 개화기 언론에서 나타난 벽돌신문을 떠올리게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노일전쟁기부터 일제가 한국 언론에 직접 통제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사전검열을 실시하였다. 이 검열에서 문제가 있다고 삭제 지시를 하면 당시의 언론인들은 이를 다른 기사로 대체하지 않고 활자를 뒤집어 인쇄함으로써 벽돌신문이라는 역사적 유물을 남겼다. 이에 대해 『대한매일신보』는 1908년 4월 26

일자의 ‘벽돌신문을 낚는 법’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벽돌신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였다. 벽돌신문을 볼 때는 첫째 대한이라는 두 글자를 잊지 않으려는 사상을 가지고 볼 것, 둘째는 세계와 그 속의 한국이 어떠한 정황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며, 셋째로는 한국신문 중에 조국 정신을 잃지 않은 것이 몇이나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보고, 넷째 뒤집힌 말이 우리나라에 이로운 말일까 해로운 말일까를 생각하며 보고, 마지막으로는 삭제 당할 내용을 게재하려 한 의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읽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 논설은 말미에서 “이 신문을 보면 사립의 권리 회복할 스상이 절노 발싱흐리니 이 법으로 이 신문을 보면 비록 전폭을 다 업혀노흔들 무슨 관계가 잇스리오”라고 덧붙이고 있다. 비록 검열에 의해 내용을 전달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통해 민족 사상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박정희 정권기의 신문은 권력의 통제뿐만 아니라 내부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독자들의 대응에서는 개화기의 벽돌신문을 보고 무언가를 헤아리려던 독자들의 노력이 박정희 정권기에 행간읽기라는 형태로 되살아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도 신문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기대가 있던 시기에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독자들은 이면에 무언가 잠재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를 파헤치려 애썼던 것이다.

4.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적극적 대응

1) 대학생들의 언론 규탄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책동은 사회 제반 부문을 탄압하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었지만 무기력한 언론의 모습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불만을 대학생층을 중심으로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대학생들의 시위에서 언론이 취재 거부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규탄

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정계의 핵심 쟁점이 되었던 3선 개헌을 둘러싸고 언론이 보여준 보도 태도는 수용자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1969년 6월경부터 대학가에서는 3선 개헌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 급기야 7월 3일에는 서울대에 휴교령이 내려지기까지 했다. 야당인 신민당을 중심으로 3선개헌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 유세를 벌이는 등 반대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송건호, 1990, 165쪽).

하지만 언론들은 지면을 통하여 이러한 3선개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정당성을 강화해 주기 위한 보도에 열을 올렸다. 모든 신문들이 대등소이하게 캠페인성 기사로 지면을 채우다시피 했다. 각계 인사들을 동원하여 개헌을 찬양하고 지지하는 내용으로 넘쳐났다.

이렇듯 언론이 왜곡된 모습을 보이자 언론에 대한 독자들의 불신과 불만은 높아만 갔다. 특히 대학생들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묵살'한다는 것이 불신의 주된 내용들이었다. 기자들로서는 대학가의 집회나 시위를 취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 "취재해도 지면에 보이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취재하려 하느냐며 학생들은 취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학가 시위 현장에 접근을 거부당하기까지 했다고 한다(『기자협회보』, 1969. 6. 27).

대학생들은 집회나 성명서 발표 등의 형태로 언론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규탄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 7월에 고대생들은 '언론인들에게 보내는 공개장'을 채택, 발표하였다. 그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기자협회보』, 1969. 7. 11.).

우리네 주위엔 다시 반민주적 반역의 풍조가 풍미하고 있는데 이러한 풍조를 통쾌하게 질타하던 언론은 그럼 어디로 가고 말았는가?

지사적 긍지와 용기로써 난국을 파헤치고 전진하던 옛날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왜 모두가 저 먼편의 불인양 관상만 하는 방관자로 주저앉고 말았는가?

심지어는 야차귀(夜叉鬼)의 시녀로 타락하지 않았는가?

왜 선정과 색정으로 넘쳐흐르는 보도 풍조만 판을 치고 있는가?
 소비적이고 퇴폐적이며 소시민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기에만 왜 혈안이 되어 있는가?
 반민주질서의 홍수 속에서 씹어가는 민주 정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가?
 언제부터 언론은 그렇게 백성의 권익에 등져서 지배계급에 아부하는 아침배가 되고 말았는가? 아침으로 배를 불리며 백성의 내일을 장사지내려는 상여꾼들이여, 가라. 한가하고 유복한 장사치 지배계급의 충실한 호위병들이여, 가라. 저 골고다의 계곡으로 사라져가라. 무기력한 필봉은 무기력한 백성을, 마취당한 필봉은 마취당한 백성을 만들뿐이 아니냐?
 우리는 언론마저 좌절당하고 무력화해 비리고 또는 아침해버리는 그런 오늘의 한국 현실을 통곡한다.
 언제나 어둠을 밝히는 위대한 햇불이었던 언론인이여, 본디 그 반동적인 내적, 왜적 압력을 의연히 박차고 일어서라, 쫓기하라.
 다시 이 병든 하늘에 불의 노호를 발화하라. 역사는 가장 위대한 너의 불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자요 역사의 기록자가 되어야 할 언론이 ‘방관자’와 ‘시녀’가 되고 말았다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대생들도 ‘맥없이 쓰러져 가는’ 언론을 질타하는 메시지를 채택, 공표하였다. ‘범연세 호헌투쟁위원회’ 명의로 1969년 7월 2일 발표된 이 성명에서 연대생들은 “오늘 우리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 이 나라 양심의 극한이며 지성의 심볼인 한국 언론이 맥없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볼 때 한국 언론 반세기 역사에 오늘만큼이나 무력함이 더 컸던 때가 있거나 생각할 때 우린 더할 수 없는 괴로움과 절망의 나락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고 당시 언론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한국 언론에 대해 “그 무기력과 나태를 박차고 일어나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리는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민주헌정수호투쟁에 과감히 참여하라! 우리의 외로운 투혼을 외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벽차오르는 기대와 뜨거운 열망으로 한국 언론계에 호소하고 싶다”고 강력히 투쟁해 줄 것

을 요청하였다(『편집인협회보』, 1969. 8. 5.).

한편 9월 3일에는 연세대 총학생회가 언론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해 “외부의 압력이나 제재로 인한 언론의 타락은 바로 민주주의의 죽음이므로 언론인들은 다시 한 번 냉정한 언론인의 양심과 지성과 용기를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강준만, 2000, 435쪽).

더구나 1970년에 들어서는 두 개의 언론계 추문 사건이 터졌다. 그 하나는 전북 이리 지역의 중앙지 및 지방지 기자 28명이 구속되어 그 중 20명이 공갈·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례없는 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그해 9월 각 언론사 부장단의 외유와 관련된 추문사건이었다. 이들은 정부 측의 부담으로 동남아 순방을 다녀오면서 녹용을 대량으로 반입하려다 말썽을 빚게 된 것이다. 그러나 두 사건은 언론계 내의 치명적인 치부에 관한 문제이므로 각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으며 아무런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채백, 2005, 179~182쪽).

하지만 이 사건이 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언론의 위신은 그야말로 땅에 떨어지고 언론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서 언론에 대한 질타와 규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만 갔다. 1970년 11월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 사건을 전해 듣고는 언론을 맹렬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점잖은 언론인들이여 거칠게 저항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신문사의 문을 닫고 참회하라. 삼천만 민중 앞에 속죄하라. 무슨 글을 쓰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하면서 “오늘날 당신들의 노예적 굴종상태가 당신들이 뒷구멍으로 향용 불어대던 그 외부압력 때문만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스스로 썩었음을 알았다. 한 가닥 언덕마저 허물어졌다”는 말로 권력의 탄압만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 스스로도 썩었다는 불신과 부정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언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다. 선언문은 이어서 “저항하라, 저항처럼 순수하고 고결한 생의 모습이 또 있는가.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당

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아니한가. 당신들 뒤엔 삼천만 민중이 있고 반만년의 민족사가 있고 또 자유에의 세계사가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면서 저항을 촉구하였다. 또한 “언론계를 발판으로 세속 출세를 탐하는 사이비 언론인들이여, 당장 펜대를 던져라. 권력이 그리우면 직접 정치판에 뛰어들라. 돈을 벌려는 자는 장사판에 들어가라. 기회주의자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다”라고 하여 왜곡되고 굴절된 모습의 언론을 강도 높게 규탄하였다(김삼웅, 1984, 127~129쪽).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기자들일 뿐 다수는 그렇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박정희 정권기 대학생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매우 높았음을 잘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은 언론에 대해 비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신, 나아가서 부정에까지 이를 정도였던 것이다.

2) 언론 화형식

독자들, 특히 대학생들의 신문에 대한 불만과 부정은 규탄을 넘어 구체적인 저항, 화형식으로까지 나아갔다. 먼저 표적이 되었던 것은 주간지들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신문사들의 주간지 창간이 붐을 이루며 선정적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까지 빚어지게 되었다. 이른바 당시 주간지의 선정성뿐만 아니라 저급 문화의 상징적 아이콘이 되고 있는 『선데이서울』을 비롯해서 각 신문사의 주간지들이 치열한 선정 경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대학생 종교 단체가 가장 먼저 반기를 들었다. 서울대 문리대 기독교학생회는 1969년 6월 10일 교내에서 집회를 열어 탈선 매스컴 화형식을 벌이고는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였다. 학생들은 취지문에서 “현대문명을 쪼먹는 방종한 섹스와 난폭한 리크리에이션은 매스컴을 통해 순진한 동심을 타락시키고 사회윤리를 매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간행물 60여 권을 불태웠다(『조선일보』 6, 11, 7면).

학생들의 극단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별다른 변화가 없자 급기야는 신문사 바로 앞에서 대학생들이 언론 화형식을 벌이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1971년 3월 24일 서울 법대생 100여 명은 교내에서 언

론인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열고 이어서 법대 도서관 뒷마당에서 대학 신문, 일간신문, 잡지 등을 소각하는 언론 화형식을 거행하였다. 학생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문사 앞에서의 화형식을 시도하였다. 당시 서울대생들의 언론규탄위원회가 발표한 ‘언론화형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자협회보』 제175호, 1971. 4. 2.).

언론화형선언문

오늘의 언론은 민중의 지표를 설정하는 지도적 기능커녕 사실마저 보도하지 않아 보도적 기능까지 몰각해 가고 있다. 와우아파트, 정인숙 여인사건 당시 언론은 무엇을 얼마만큼이나 파헤치고 진실 되게 보도했는가? 일부 극소수의 반민중,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사회 고발은 물론 수많은 영세민들의 생활 참상 한번 진실 되게 보도했는가?

대학마저 군부에 예속시키고 병영화하며 온 국가를 침묵과 암흑의 세계로 바꾸려는데 조상님 신주 모시듯 하는 부·차장들, 그들은 외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암장시키고 있다.

이제 권력의 주구, 금력의 시녀가 되어 버린 너 언론을 슬퍼하며, 조국에 반역하고 민족의 부름에 거역한 너 언론을 민족에 대한 반역, 조국에 대한 배신자로 규정하여 반세기의 찬연한 전통에 한을 남긴 채 전 민중의 이름으로 화형에 처하려 한다.

권력과 금력의 앞잡이로 전락한 언론은 학생들에 의해 ‘조국과 민족에 대한 반역자, 배신자’로 규정되며 화형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법대, 상대의 학생회장단 10여 명은 3월 26일 오후 3시 동아일보사 앞 세종로 지하도 입구에서 언론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언론규탄준비위원회 명의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화형식을 거행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긴급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집회는 10분여 만에 무산되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의 철권 통치 하에서 대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언론 규탄과 화형식은 언론계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다. 젊은 세대를 대

표하는 대학생들에 의해 바로 언론사 문 앞에서 화형식이라는 극단적 행동이 이루어지자 언론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과 자괴감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이렇듯 언론에 대한 불신이 노골화되자 언론계는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1970년대 초반 각 언론사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운동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언론 화형식이 시도된 얼마 뒤인 그해 4월 15일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수호선언’을 한 것을 기화로 여러 신문사의 기자들이 언론자유 선언 대열에 참여하였다(채백, 2005, 169~188쪽).

3) 독자들의 연대와 참여: 동아일보 광고 사태

독자들은 화형식을 벌이며 저항하고 기자들은 언론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선언으로 화답하였지만 박정희 정권은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1972년 10월 유신을 통해 영구집권을 획책하며 강압적인 정책을 견지하여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운동은 위축되고 말았다. 그러자 대학생들이 또 다시 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가의 시위 현장에서는 언론이 계속 규탄과 각성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1973년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생들에 의한 첫 번째 반유신 시위에서 학생들은 선언문을 통해 “학원과 언론에 가증스러운 탄압을 가함으로써 영구집권을 기도하고 있다”고 유신헌법의 본질을 규탄하며 4가지 결의 사항의 하나로 ‘기성 정치인과 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하였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274~275쪽). 이를 계기로 반유신 시위가 전국 대학가로 번지면서 대부분 언론 문제가 결의사항에 포함되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9, 109~119쪽).

이에 자극을 받아 언론계에는 제2차 언론자유수호운동이 전개되었다. 1973년 10월 『경향신문』부터 언론의 본분을 다할 것을 선언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각 언론사 기자들이 같은 취지의 언론자유수호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기자들의 제2차 언론자유실천운동은 1974년에 들어서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투쟁을 위해 언론노조

설립까지 시도되었다. 그해 3월 『동아일보』가 먼저 노조 설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권력은 탄압 일변도의 정책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굴복한 회사 측도 주도적인 기자들을 인사 조치하며 운동을 탄압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자유언론수호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하던 『동아일보』에 대해 광고 탄압이라는 전대미문의 통제를 시도하였다. 『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었거나 신기로 계약되어 있던 광고주들에 압력을 행사하여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74년 말부터 광고주들이 하나 둘 광고를 철회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광고란이 백지로 나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광고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자본주의 언론의 약점을 악용하는 교묘한 탄압책이라 하겠다.

『동아일보』의 광고면이 백지로 나가자 1974년 12월 30일자에 원로 언론인 홍종인이 광고비 10만 원을 개인 부담하며 의견 광고를 게재하였다. ‘언론 자유와 기업의 자유’라는 제목의 이 광고에서 홍종인은 “동아일보사에 실려야 할 신문광고에 대한 강제 해약은 일시적으로는 어떤 힘의 작용으로 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일은 감히 해서도 아니 될 심히 위험한 권력 자신의 자해 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를 계기로 독자들이 나서서 『동아일보』의 빈 광고면을 채우기 시작하였다. 1975년 신년호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신민당의 광고가, 1월 4일자에 자유실천문인협회의 격려 광고가 게재된 것을 계기로 1월 7일부터는 일반 독자들의 격려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하였다.

이 격려광고운동에는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대부분 익명이 많았지만 신분을 밝힌 사례 중에는 절반 정도가 학생들이었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및 초등학생까지 참여하였다. 학생 외에는 전문직에서부터 농민과 주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업 집단이 참여하였다. 지역적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 및 외국인들도 참여하였다. 이 격려광고 운동은 1975년 5월 중순까지 총 1만 352건이 접수되었다.

독자들의 눈물겨운 참여와 격려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격려광

고운동은 권력의 탄압에 굴복한 회사 측이 그해 3월 17일 회사에서 농성 중이던 언론인들을 폭력배를 동원하여 강제로 해산하였으며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소속 언론인 118명을 해고하였다. 회사측은 그해 7월 11일 ‘긴급조치 9호를 준수한다’고 서약하고 말았다. 이로써 7월 16일부터 다시 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하면서 독자들이 참여한 『동아일보』 돕기 운동은 막을 내리고 말았다(이상은 채백, 2005, 189 ~ 213쪽).

이 사례는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교묘했지만 독자들이 나서서 지면에 격려 메시지를 유료로 광고란에 게재하는 형식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독특한 형태의 수용자 운동이었다. 권력에 굴복한 언론에 실망하고 비판은 하였지만 그래도 신문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언론 기능을 해주어야 한다는 당위적 인식의 바탕 위에서 독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권력과 이윤에 민감한 사주와는 달리 올바른 언론의 길을 모색하려는 기자들의 움직임이 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5. 언론 통제의 문화적 산물

박정희 정권의 체계적인 언론 통제와 언론들의 협조는 새로운 문화적 양상을 낳게 되었다. 박정희의 집권 시기는 “여의도 정치판으로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적 무의식까지 지배”한 시기였다고 평가(권보드래·천정환, 2012, 7쪽)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와 경찰 등 억압적 국가 기구를 총동원하여 개인의 자유를 숨막힐 정도로 통제한 사회였다. 이러한 상황은 전술한 대로 독자들의 비판과 저항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양상을 낳게 된 것이다.

1) 유언비어

72세의 한 할머니가 1977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불륜설을 유포하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37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일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다(<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3/31/20140331006993.html> 2014. 4. 7.). 박정희 정권기의 폭압적 통제가 개인의 삶까지 철저히 유린해 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이 통제된 사회에서는 유언비어가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에 대한 욕구와 실제 제공되는 정보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유언비어인 것이다(원우현 편, 1982). 독재 권력의 부패는 날로 극심해 가고 급격한 산업화의 모순은 각 부문에서 터져 나오는데 권력에 의해 통제된 언론은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던 박정희 정권기에는 많은 유언비어가 발생, 유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74년 1월 8일에 공포된 긴급조치 제1호에서부터 3항으로 “유언비어를 훼손,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경향신문』 1974. 1. 9. 1면)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적발되면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도록 하였다. 얼마 뒤인 그해 3월 8일에는 두 명의 시민들에게 유언비어 유포죄를 적용하여 각 10년과 12년을 선고하였다(『경향신문』 1974. 3. 8. 1면). 더 나아가 1975년 5월의 긴급조치 9호에서는 첫 번째 항목으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선포하였다(『동아일보』 1975. 5. 13. 1면).

정부 당국자들은 유언비어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야 했다. 예컨대 1975년 3월 1일에는 김종필 국무총리가 화폐개혁, 환율 인상 등의 유언비어를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하였다(『동아일보』 1975. 3. 1. 1면). 이처럼 유언비어를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유언비어가 널리 유행하였음을 반증해 준다. 당시의 야당

인 신민당은 1977년 3월 유언비어를 단속한다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빈발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정도였다(『동아일보』 1977. 3. 7. 1면).

실제로 이 긴급조치 9호로 많은 사람들이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례들이 생겨났다. 1975년 7월에는 학원강사 윤당용이 강의 중에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하여 구속되었으며 1976년 2월에는 이화영, 최상호 두 재수생이 반정부 풍자시를 프린트해 배부했다가 구속되었다. 1978년 5월에는 동성고 국어교사 조병한, 그해 4월에는 완도 청해 초등학교 교사 박만철을 수업 내용을 문제 삼아 각기 반공법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하였다(신동호, 2007, 315쪽).

철저한 탄압의 분위기 속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정치적 비판과 불만이 필연적으로 유언비어를 낳게 되었고 권력은 이를 중죄로 처벌함으로써 권력의 영구화를 도모했던 악몽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다.

2) 레드 콤플렉스

유언비어가 확산될 상황이 발생하면 대부분 ‘북괴의 책동’으로 연결시켰다. 치안본부는 1977년 2월 “요즘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날조 유포하여 민심을 교란하고 상투적인 북괴 선전에 역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유언비어의 진원을 색출, 엄단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미 유언비어 날조 혐의로 10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하였다(『동아일보』 1977. 2. 22. 7면). 정치적 불만과 비판을 분단 체제 하에서 북한과 연결시킴으로써 다수 대중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하는 선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박정희 정권의 대국민 선전에서 가장 즐겨 사용한 카드가 바로 이 레드 콤플렉스였다. 분단 체제 하에서 북의 남침 위협을 과장하여 전쟁이 임박했다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권력의 공고화를 도모했던 것이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에서 ‘김일성’과 ‘남침’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면 유신정권기에 집중된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 특히 1975년에는 『경향신문』 199건, 『동아일보』 121건이 검색(네이버 뉴스라이브

러리 참조 <http://newslibrary.naver.com/> 2014. 4. 7.)되는데 이 기사들은 대부분 김일성이 곧 남침을 강행할지 모른다는 정보나 그런 동향이 있다는 내용들이다.

정치적 반대의 분위기가 고조될 즈음이면 거의 뒤이어 간첩단 사건이 1면과 사회면을 장식하곤 했다. 예를 들면 1973년 하반기부터 대학가에서 유신반대 시위가 확산되어 가고 기자들은 제2차 언론자유수호운동을 벌이자 정부는 1974년 새학기가 시작하자마자 3월 15일 울릉도 간첩단이라며 47명을 ‘일망타진’했다고 발표하였다.¹ 이에 따라 각 언론은 정부의 발표 내용을 1면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 걸쳐 관련 기사들로 장식하였다. 이어 4월 초에는 유명한 ‘민청학련’ 사건을 터뜨리면서 이마저도 “정권 전복과 국가 변란을 이룩하려는 북괴의 대남 전략에 완전 부합되는 책동”(『동아일보』 1974. 4. 6. 1면)이라고 몰아갔다. 정치적 위기를 레드 콤플렉스를 이용하여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 간첩이란 권보드래와 천정환(2012, 173~175쪽)에 의하면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만들어낸 특별한 인간 존재이자 특산물’로서 ‘군과 정보기관을 정점으로 대북·대민 반공주의 선전과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표상의 집합체’이며 ‘한국식 반공주의의 대표 기표’라고 규정된다. 레드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상징조작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가끔 남침 땅굴이 발견되면 관련 보도가 지면에 대서특필되고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동원된 다수 국민들은 여의도 광장을 메우고 북괴의 남침 야욕을 규탄하는 궤기대회를 열어 결전의 의지를 다졌으며 신문들은 이를 1면 톱기사로 대서특필하곤 했다(예컨대 『동아

¹ 이 사건은 최근 법원의 재심에서 4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납북 어부나 이산 가족들에게 고문을 통해 간첩죄를 뒤집어 씌워 만들어낸 이 사건은 최근 〈상처꽃-울릉도 1974〉라는 제목의 연극으로 상연되기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기사 ‘이빨 다섯 개가 후두둑... 울릉도 간첩은 이렇게 탄생했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6155&CMPT_CD=P0001 2014. 5. 12.)를 참조 바람.

일보』, 『경향신문』 1978. 10. 31. 1면).

전쟁이 목전에 있어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인데,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배부른 소리’는 뒷전으로 밀려 그 울림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당시의 다수 국민들이 느낀 전쟁에 대한 공포와 위기감은 상당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며 집권을 연장해 갈 수 있었다. 독자들로서는 언론 통제와 억압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처한 분단 현실에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레드 콤플렉스는 1979년 박정희의 죽음으로 맞게 된 1980년의 민주화 국면이 민주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신군부의 등장을 가져 오게 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도 하였다. 이 국면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북괴의 남침 위협이었던 것이다.

3) 개인의 말할 자유와 칸막이

유신 정권 하에서의 언론 탄압은 매스 미디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개인의 말할 자유까지 통제되던 상황이었다. 개인이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발언도 극도로 탄압받아야 했다. 『동아일보』의 해직 기자였던 이종대는 해직 시절을 돌아보면서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 가면 참석자들은 “한 번씩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회고하였다(윤활식 외, 2013, 194쪽). 주변에 누군가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것이 당시 일반 시민들의 몸매 밴 습관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극심한 언론 탄압이 만들어낸 풍속도였다.

실제로 사석에서의 발언 때문에 긴급조치 위반 등의 죄목으로 처벌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예를 들면 충북 괴산의 한 농부가 1975년 6월경 마을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동아일보』 1975. 8. 28. 7면). 또한 택시를 타고 가다 정치를 비판하면 기사가 차를 바로 경찰서로 몰아 구속되는가 하면(『동아일보』 1979. 11. 9. 7면) 반대로 택시 기사가 대통령을 비난

하자 승객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구속된 사례(『동아일보』 1979. 11. 2. 7면)도 있었다. 사적인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마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억압받던 게 유신 시대의 언론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칸막이 문화였다. 술집뿐만 아니라 찻집, 레스토랑에도 칸막이가 등장하면서 확산되어 갔다. 숨 막히는 통제 상황에서 사석이라도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없던 사회 분위기가 바로 이 칸막이 문화를 배태한 것이다. 칸막이 쳐진 밀실에 들어가야 사람들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친구, 동료들과 주위 눈치 안보고 개인적인, 때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 칸막이 밀실이 상업주의와 연결되면서 퇴폐의 온상이 되어 또다른 사회 문제를 낳고 말았다. 이에 정부는 술집에 칸막이를 없앤다고 칼을 빼들었지만(『동아일보』 1974. 1. 7. 6면) 당시의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비자들의 욕구에 딱 맞아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행정 조치만으로 근절할 수는 없었다. 칸막이는 오히려 더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퇴폐 문화도 더욱 확산되어 갔다(『동아일보』 1974. 11. 7. 7면). 정치권력이 엄단한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말뿐이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퇴폐 풍조에 오히려 너그러웠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강준만, 2007, 504쪽). 이러한 퇴폐 풍조는 국민들의 탈정치화를 유도하는 독재 정권의 3S 정책과도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박정희 정권기를 대상으로 신문 독자집단의 신문에 대한 인식과 행동, 그리고 당시의 언론 상황으로 인한 문화적 산물을 살펴보았다. 정치권력에 의해 언론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언론은 이에 협조하면서 기업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과 대응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독자들의 불만과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정치적 정보의 부족과 비판의 실종에 대한 불만이다. 독자들의 정치적 관심은 매우 높았으며 독재 정권은 부패해 가는데도 신문이 이를 제대로 보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독자들의 불만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신문의 획일화에 대한 비판이다. 탈정치화되고 카르텔 체제 속에서 안정적 성장을 추구하던 신문들은 내용 면에서 차별화될 수가 없었다. 개성을 잃고 획일화된 신문에 대해 독자들의 불만과 비판은 높아만 갔다. 이러한 신문에 대해 독자들은 개인적으로 구독을 거부하는 소극적 대응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각종 시위에서 언론과 언론인이 규탄의 대상이 되더니 급기야는 화형식까지 치러지게 되었다.

하지만 독자들은 신문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은 아니었다. 남아 있는 일말의 기대가 낳은 구독 행동이 바로 ‘행간 읽기’였다. 권력의 탄압과 사주의 눈치가 보여 활자화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자들은 무언가 지면에 단서를 남겨 놓았으리라는 기대 속에 독자들은 이를 지면에서 ‘보물 찾기’하듯 더듬어가며 읽어내려 애썼던 것이다. 또한 독자들의 기대는 『동아일보』의 광고 탄압 사태에서 의견 광고라는 형태의 연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극단적으로까지 나아갔던 독자들의 행동은 일시적으로 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운동을 가져 오는 요인이 되기는 했지만 더 이상의 변화를 가져 오지는 못했다. 그 주된 원인은 적극적 행동의 주체가 주로 대학생들로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학생 집단에 의해서 언론에 대한 저항 의지가 표명되기는 했지만 그 이상 확산되거나 조직화되지 못하였다. 이는 국민 개인의 말할 자유와 행동의 자유까지 철저히 억압하는 박정희 정권의 탄압 정책에 기인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더구나 정권은 언론을 동원하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비판 세력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확산되거나 더 이상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했다.

박정희 정권기의 언론에 대한 통제와 회유는 한국 신문에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도 독자들에게는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가져다 주고 말았다. 권력의 비호와 카르텔 체제 속에 손쉽게 기업적 성공을 이루다 보니 언론은 광고주들에게도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언론의 권위주의적 태도는 1987년 이후의 무한경쟁 체제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쉽사리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신문이 직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로 달라진 매체 환경에 시장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소비자인 독자들에게 어필할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안일한 자세가 이를 잘 말해 준다. 이러한 태도들이 인쇄매체의 전반적인 사양화와 겹치면서 한국 신문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준만 (2000). 『권력변환: 한국언론117년사』. 서울: 인물과사상사.
- 강준만 (2007). 『한국대중매체사』. 서울: 인물과사상사.
- 권보드래 · 천정환 (2012). 『1960년을 묻다』. 서울: 천년의상상.
- 김남석 (1994). 한국 신문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삼웅 (1984). 『민족 · 민주 · 민중 선언』. 서울: 일월서각.
- 김해식 (1994). 『한국언론의 사회학』. 서울: 나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 유신체제기』. 서울: 돌베개.
- 서정우 (1988). 신문카르텔의 운용과 기능. 『신문연구』, 여름호 통권 45호, 47~57쪽.
- 송건호 (1990). 『한국현대언론사』. 서울: 삼민사.
- 신동호 (2007). 『70년대 캠퍼스1』. 서울: 환경재단 도요새.
- 원우현 편 (1982). 『유언비어론』. 서울: 청람.
- 윤상길 (2013). 우편배달에서 모바일 뉴스서비스까지: 한국 신문 유통의 사회문화사. 박용규 외. 『한국 신문의 사회문화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129~187쪽.
- 윤희식 외 (2013). 『1975: 유신독재에 도전한 언론인들 이야기』. 서울: 인카운터.
- 정진석 (2012). 제3공화국의 언론: 구조개편, 통제와 저항.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과역사 분과(2012). 『제3공화국 시기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 연구』. 기획공동연구 세미나 발표자료집, 1~15쪽.
- 주동황 (1993). 한국정부의 언론정책이 신문산업의 변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일고찰: 제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백 (2013). 계몽의 대상에서 행동하는 독자까지: 한국 신문 독자의 사회문화사. 박용규 외. 『한국 신문의 사회문화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18~69쪽.
- 채백 (2005). 『한국언론수용자운동사』. 서울: 한나래.

채백 (2000). 박정희 정권과 한국 언론. 최장집 외. 『한국 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
서울: 한가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사』.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사회언론연구회 (1996). 『현대사회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서울: 한울아카데미.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과역사 분과 (2012). 『제3공화국 시기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 연구』. 기획공동연구 세미나 발표자료집.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과역사 분과 (2013). 『1960년대 정부의 공보정책과 언론단체 활동에 관한 연구』. 기획공동연구 세미나 발표자료집.

한홍구 (2014). 『유신』. 서울: 한겨레출판.

『경향신문』, 『기자협회보』,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편집인협회보』, 『한겨레』.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Abstract

A Sociocultural History of Newspaper Audience in the Era of Park Chung-Hee Regime

Baek Cha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ociocultural history of newspaper audience in the era of Park Chung-Hee Regime. Because the mass media of that time was tightly controlled by the political power and devoted to only the commercial growth, the complaint and criticism of newspaper audience were remarkably increased. The main complaint of the audience was that the shortage of political information and the vacuum of critique to the political power. In addition audience had strong discontent to the homogeneity of newspaper contents which was an outcome of the cartel between major newspaper corporations. The reactions of audience contains the stop of subscription, impeachment in the demonstration by university students and the burning to death of the media in the public space. Meanwhile the audience had created the new type of reading between the lines. The severe press control and propaganda of Park chung-Hee Regime resulted in the overflow of rumors, deepening of overreaction for communism and new communication pattern in the compartmented rooms.

KEYWORDS media history • newspaper • audience • sociocultural history • Park • Chung-Hee Regime